돈다발·관권선거… 민주당 개혁공천 먹칠

검찰, 화순군수 참모 구속·서구청장 영장은 기각

"엄격한 공천기준 원칙지킨 한나라당 보다 못하다"

6·2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개혁공천을 하겠다던 민주당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 비틀거리면서 '개혁 공천'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다.

경선에서 승리한 기초단체장 후보가 구속되는 등 상당수의 공천 확정 후보들이 검찰이나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경선 승리가 유력한 후보들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천 후폭풍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텃밭인 호남지역에 집중되면서 민주당을 더욱 당황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 인사들은 줄줄이 공천을 받거나 경선 후보로 선정되면서 한나라당 지방정부의 비리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지방권력 심판론'을 내세웠던 민주당 지도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 확정판결 전 기소가 이뤄진 후보조차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정한 한나라당보다 훨씬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충식 해남군수가 21일 경선(여론조사)에서 승리했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직후,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압수수색에서 돈다발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22일 구속되자 당 분위기는 쑥대밭이 됐다. 곳곳에서 탄식과 자조가 터져나왔으며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초단체장 급에서는 김 군수 외에도 공천이 확정된 전완준 화순군수의 선거참모가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전 군수의 경우 관사 압수수색까지 받는 등 검찰 수사 강도가 거세지고 있어 중앙당의 걱정이 태산이다.

또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은 관권선거 혐의로 검찰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 서구 공천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더욱이 해남군수를 구속한 경찰이 목포시와 여수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며 단체장과의 관련 여부를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민주당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호남 외에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인 유덕열 전 민주당 조직위원장이 4년 전 공천헌금 문제로 한화갑 평민당 대표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복기왕(아산시장), 김맹곤(김해시장)씨는 공천이 확정됐고 김기석 전 의원은 부천시장 경선을 앞두고 있는 등 민주당이 애초 추구했던 개혁·클린공천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라는 평이 일반적이다.

광역단체장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광역단체장 선거 중 유일하게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용했던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경선이 끝난 지 12일이 지났지만 당선(후보)자 확정을 하지 못한 채 재심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후보 사이에 각종 음해와 비방, 모략이 난무하고 있다. 또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은 하지도 못한 채 오는 28일 소집될 당무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주류와 비주류 측이 대격돌이 예고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공천과 관련 원칙과 기준을 잃으면서 전체적인 경선과 공천 과정이 혼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걱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우산동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광산구(갑)기초의원 경선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과 광산지역 후보자들이 두손들어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검찰 기소 내용 검토 후

조만간 서구청장 후보 결정

검찰이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의 후속 조치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정치적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감안, 검찰의 기소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서구청장 후보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은 선거 준비에 공무원 동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와 구속영장 재청구를 놓고 막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서두르지 않고 구속 수사 혹은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검찰의 조치 이후 서구청장 후보 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와관련 이날 서구 을이 지역구인 김영진 의원을 만나 서구청장 후보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광주·전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구청장 후보 선정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아직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구 갑이 지역구인 조영택 의원은 "지방 일정이 있어 정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을 통해 서구청장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수십 명의 공무원이 관권선거에 동원됐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파장이 심각해 어떤 식이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야간경관사업 무엇이 문제였나

목포 25건 113억 공사 서울업체 한곳 독식

전남 전체 38% 수주… 유지비 많고 에너지 낭비 비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2005년부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야간경관사업은 그동안 예산 낭비·졸속 추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야간경관의 개선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관광객 유치 보다는 전시형 사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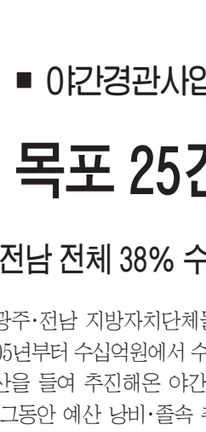
에너지 절감에 나서야 할 공공기관이 에너지 사용량이 크고, 운영비가 많이 드는 화려한 조명을 과도하게 설치함으로써 가뜩이나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컸다.

김충식 해남군수에게 1억9000만원을 건넨 업체는 (주)나이토피아로, 지난해 해남군으로부터 26억3400만원 규모의 '땅끝 관광지 경관조명사업'을 수주했다.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 2005년 설립됐으며, 설립 첫 해 15건, 2006년 13건, 2007년 23건, 2008년 17건, 2009년 7건의 사업을 따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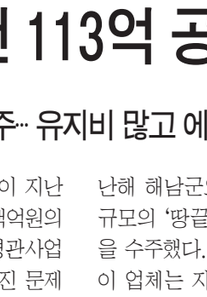
특히 이 업체는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집중 공략했다. 지난 5년간 목포시가 발주한 '갓바위 보도육교 경관조명 실시설계 용역 설치공사' 등 경관조명사업 25건 모두를 혼자 독식한 것을 비롯, 해남 '땅끝 관광지 경관조명사업'과 여수 '도심권 친수연안 3개 지구 친환경·재생에너지 경관조명사업' 등 2건, 강진 '강진군 홍보탑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모두 29건을 맡았다. 전체 수주사업 75건 중 무려 38.7%를 전남지역에서 따낸 것이다.

사업 규모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무려 113억7000여 만원을 야간경관사업에 투입한 목포시의 경우 예산투자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져 목포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사업의 즉각 철회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목포문화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목포의 경우 야간경관사업 유지비로 연간 약 1억5000만원에 이른다"며 "목포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2009 목포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용역 중 실행계획인 권역별 사업추진 예산을 살펴보면 총 901억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윤헌석기자 chadol@



정종득



정종해

민주 목포시장 후보 정종득

보성군수 후보 정종해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에 정종득 현 시장이, 보성군수 후보에 정종해 현 군수가 각각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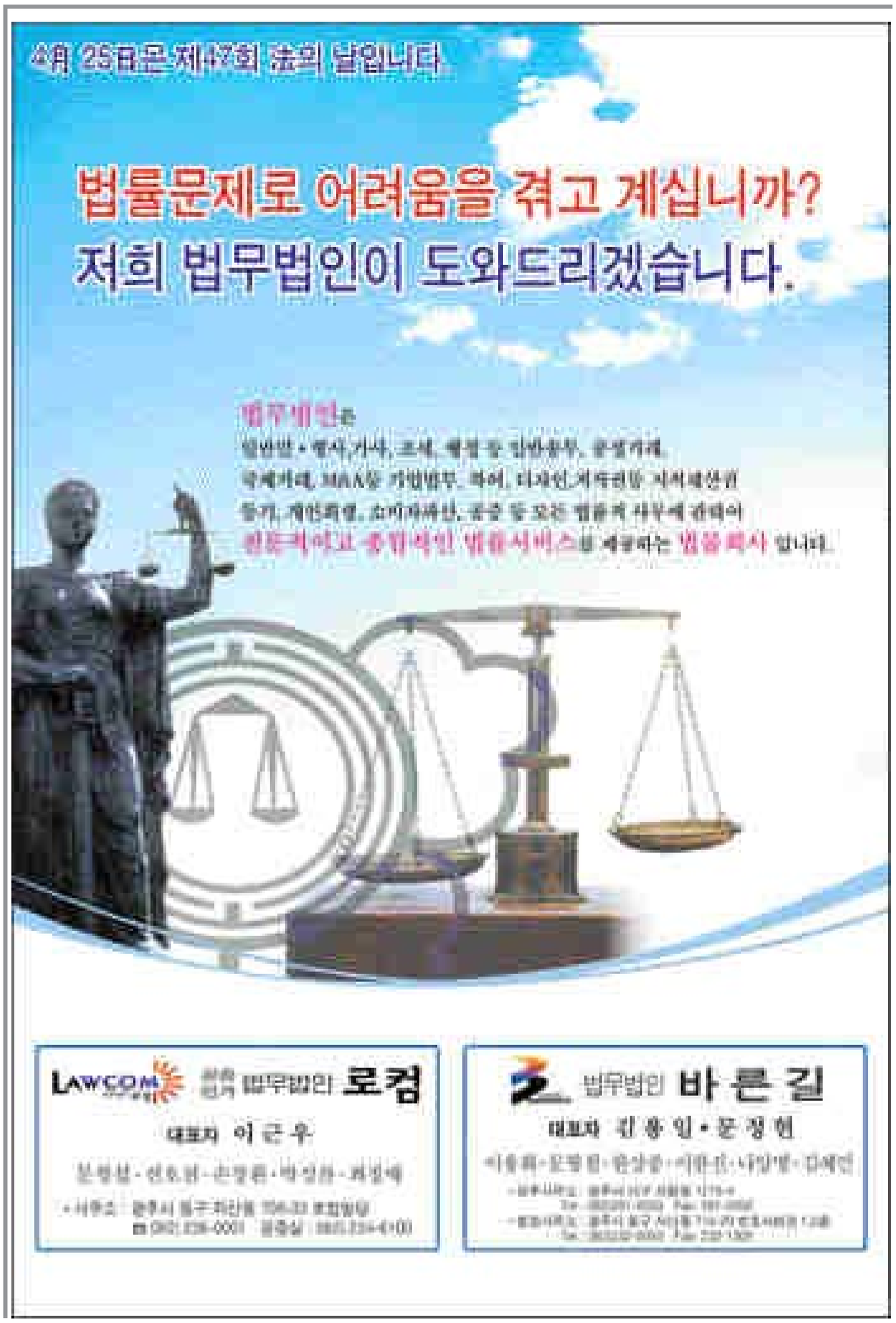
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당원 여론조사와 주민 여론조사를 각각 50%를 반영하는 경선을 통해 정종득 목포시장과 정종해 보성군수를 각각 민주당 목포시장과 보성군수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경선결과 정종득 후보는 54.95%, 정종해 후보는 55.17%의 지지율을 얻어 경쟁후보들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

檢, 이은·조보훈 예비후보 조사

이은 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조보훈 후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일 고발인 측인 이은 후보의 대리인을, 다음날에 조보훈 후보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여론조사 당시 합의된 내용이 아닌 추가 질문이 포함됐는지 여부, 조 후보 단독으로 조사 의뢰한 배경, 1800여만원의 조사비용 전액을 조 후보측이 지불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이은 후보는 지난 16일 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인 구희승·이은·조보훈 등 3명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추진 과정에 불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돼서 단일화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조보훈 후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조 후보측은 오는 26일 예정된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이번 고소·고발사건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이은 후보측은 무소속 출마 혹은 출마 포기 등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